



KOTRA 워싱턴 D.C.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2회(화/목) 배포합니다.



📌 주요 내용

🎯 워싱턴 D.C. 포커스

- (무역협정) 美 USMCA 재협상 논의 본격화, 미경신 시 공급망 및 고용 영향 분석 2
- 재협상 실패 시, 역내 △공급망 혼란 △관세 인상 △일자리 감소 등 광범위한 경제 혼란 경고

📊 경제통상 동향

- (관세) 美 하원, 트럼프 행정부 IEEPA 기반 캐나다 국가비상사태 종료 결의안 가결 5
- (관세) 美 상원, First Sale 관행 차단 및 통관가치 기준 강화 입법 발의 6
- (경제지표) 美 1월 고용 대폭 증가, 실업률 4.3%...고용시장 회복세 조짐 7
- (관세) PIIIE,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이 대미무역에 미친 영향 분석 8

⚖️ 의회법안 동향

- 핵심광물, 제조업, 적대국 견제, IEEPA 관세, 규제 등 상·하원 발의 총 5건 9

💬 이시각 헤드라인

-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9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10

📅 워싱턴 D.C. 주요일정

2.12(목)	• 2월 1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Initial jobless claims)
2.13(금)	• 1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Core CPI)
2.16(월)	• 연방 공휴일(President's Day)
2.17(화)	• 2월 뉴욕 연준 제조업 설문조사(Empire State manufacturing survey)

(무역협정) 美 USMCA 재협상 논의 본격화, 미갱신 시 공급망 및 고용 영향 분석

1. 개 요

□ 시티그룹 보고서, USMCA 6년 차 검토 관련 주요 쟁점 및 불확실성 전망

- USMCA는 '20년 7월 발효 이후 북미 3국 간 무역 활성화의 촉진제로 작동, '24년 기준 3국 간 상품서비스 교역 규모는 1조 9천억 달러 수준
- 시티그룹은 "The Enduring Power of Three"를 통해 협정 갱신 실패 시, △공급망 혼란 △관세 인상 △일자리 감소 등 경제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전망
- USMCA 원산지 규정은 외국 기업이 역내에서 실질적으로 제조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역내 통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연간 수백억 달러 비용 절감"이라는 긍정적인 효과 발생

〈USMCA 발효 이후 북미 3국 간 교역 현황('24년 기준)〉

* 상품교역 기준 (단위: 억 달러)



* 총 교역액 : 1조 9천억 달러(상품 1조 6천억 달러 | 서비스 3천억 달러)

USMCA 발효 전 ('13-'20 평균) 대비 약 4천억 달러 증가

[자료] 유엔 상품무역통계(UN Comtrade), 시티 글로벌 데이터 인사이트

2. 상 세

□ USMCA 미갱신 시 북미 전체에 걸친 부정적 경제 파급효과 경고

- (공급망 혼란) 북미 역내 통합 공급망 붕괴로 생산 비효율 및 비용 증가 불가피
 - USMCA의 원산지 규정은 역내 생산을 촉진하는 핵심 기제로, 협정 갱신 실패 시, 자동차·전자제품·농산물 등 주요 산업의 공급망 단절로 기업들은 대체 공급처 확보 및 물류망 재구축에 막대한 비용 투입 필요
 - 멕시코 거점 ‘니어쇼어링’(near-shoring) 전략 좌초 시 미국 기업들의 대중 의존도 재증가 또는 역내 생산 비용 급증을 초래 전망
- (관세 인상) 무관세 혜택 소멸로 3국 간 교역 비용 급등 및 소비자 가격 상승
 - 협정 미갱신 시 멕시코·캐나다산 완성차 및 부품 관세가 연간 수백억 달러 규모로 증가하여, 역내 소비자 가격 인상과 판매 감소로 직결
- (투자 위축 및 일자리 손실) 불확실성 확대로 외국인 직접투자 및 고용 감소
 - '24년 캐나다의 대미 직접투자는 7,329억 달러로 USMCA 발효 후 50% 이상 증가, 3대 직접 투자국 및 '20~'24년 최대 일자리 창출국으로 부상
 - 협정 미갱신 시 신규 투자 지연·철회를 유발하며, 특히 자동차·제조업 분야에서 대규모 고용 감소 우려. 양자 협정 체제로 전환 시에도 무역 구조의 근본적 불확실성 지속으로 유사한 부정적 효과 발생

□ USMCA 재협상 시나리오 및 전망

- 조건부 갱신 가능성이 가장 유력, 멕시코·캐나다의 양보 예상
 - 협정 구조상 ① 갱신(2042년까지 연장), ② 합의 불발 시 연례 검토 체제 전환(2036년 만료), ③ 일방 탈퇴 후 양자 협정 체결 등 3가지 경로 존재
 - 대폭 수정 없는 단순 갱신은 지난 1년간 무역 긴장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낮으며, 완전 결렬 역시 3국 간 경제·정치·사회적 연계를 고려 시 비현실적이라고 평가
 -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의제를 반영한 조건부 갱신으로, 멕시코·캐나다가 일정 수준 양보할 것으로 전망

□ 트럼프 대통령, 협정 종료 가능성 시사

- 트럼프 대통령은 USMCA에 직접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정 종료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행정부 일각에서 이를 대체할 별도의 양자 협정 방안 제안 중
 -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는 “협정에 결함이 존재하며, 무조건적인 승인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재협상 가능성 시사
 - 반면, 존 코넨(공화) 상원의원은 협정 갱신을 촉구하면서 '20년 이후 캐나다·멕시코로부터 약 8천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
 - 척 그레슬리 상원의원(공화)도 “USMCA 연장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언급
- * USMCA는 3국이 동의 시 '42년까지(16년) 연장. 한 국가라도 반대하는 경우 '27년부터 연례 검토 체제로 전환되며, '36년에 최종 종료 가능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James Lee
■ 자료원	시티그룹 보고서(링크), 인사이드(2.9), 그레슬리 상원의원실(2.5)

(관세) 美 하원, 트럼프 행정부 IEEPA 기반 캐나다 국가비상사태 종료 결의안 가결

- (개요) 하원, 캐나다 관세 발동 근거 ‘국가비상사태 종료 결의안’ 처리
 - 美 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산 제품 대상 관세 조치 발동 근거였던 국가비상사태 종료를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H.J. Res. 72)을 219-211로 본회의 가결(2.11)
 - * IEEPA상 국가비상사태 종료 결의안은 신속 처리 및 상원 필리버스터 제외 대상
 - 동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IEEPA 기반 캐나다 관련 국가비상사태 종료를 목표로 하며, 공화당 의원 6명이 찬성표를 행사함에 따라 관세 정책 관련 당내 이견 재확인
- (상세) IEEPA 관세 권한 관련 사법 판단 변수 및 의회 절차 쟁점 부각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 법에 따른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 범위는 현재 연방대법원의 판단 대상
 - 연방대법원 판결 결과는 행정부의 IEEPA 기반 관세 조치의 법적 정당성, 정책 지속 가능성 및 향후 관세 정책 운용 방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
 - 하원은 관세 불승인 결의안 표결을 제한해 온 절차 규칙 만료(1.31) 및 연장 시도 부결로 관세 관련 결의안의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추진 여건 확대
- (반응) 관세 정책 관련 정책 입장 차이 부각 및 정책 불확실성 지속
 - (의회) 민주당은 관세 관련 결의안을 중간선거 대응 전략의 주요 이슈로 활용하며 의원 입장 공식 기록 추진, 공화당은 관세 조치의 정책적 정당성과 협상 효과 강조
 - (업계) 산업계 및 시장은 연방대법원 판결, 의회 결의안 표결 확대 및 행정부 대응 방향에 따른 관세 정책 변동 가능성과 이에 따른 비용·공급망 영향 리스크 주시
 - (현지) 동 결의안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존재하며, 거부권 무효화를 위해 양원 2/3 찬성이 요구됨에 따라 단기적 정책 변화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정연호
■ 자료원	폴리티코(2.11), 인사이드(2.12)

(관세) 미 상원, First Sale 관행 차단 및 통관가치 기준 강화 입법 발의

- (개요) 공화당 캐시디·민주당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은 수입물품 관세 부과 기준을 미국 수입자가 실제 지불하는 최종 거래가격(last sale)으로 일원화하는 Last Sale Valuation Act를 공동 발의 (2.11)
 - 1930년 관세법 하에서 허용돼 온 First Sale Rule(다단계 거래 중 첫 거래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인정)을 사실상 폐지. 복잡한 해외 거래구조를 이용한 관세 과소신고·덤핑형 저가 수입을 차단하고 미 제조업 및 근로자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
 - 아울러 CBP에 보다 명확한 통관가치 산정 기준을 부여해 사기·자금세탁 방지와 공급망 투명성 제고, 성실 수입자·제조업체 간 공정 경쟁 여건 조성을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
- (상세) ‘실제 거래가 기준’ 관세 부과, 집행 효율·무역투명성 제고
 - 법안은 수입물품의 관세 부과 기준을 미국 수입자에게 인도되기 직전 발생한 마지막 정상거래(last sale) 가격으로 규정해, 관련당사자 거래·복수 인보이스를 활용한 가격 축소·허위 인보이스 관행을 억제하고 관세평가 분쟁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통해 CBP의 가치 검증·유권해석 요청·서류 검증 부담을 완화하고, 관세수입 증가와 무역 기반 자금세탁 방지 등 집행 효율성과 무역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반응)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제조업·무역 단체 등 폭넓은 지지
 - 피터 나바로 백악관 제조·무역 선임고문은 First Sale Rule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산업재편 정책 효과를 잠식해 온 구조적 관세루프홀이라며, 의회 지도부에 법안의 신속한 초당적 처리를 촉구
 - Southern Shrimp Alliance는 법안 통과 시 강제·아동노동·불안전 제품 차단 등 핵심 단속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 American Compass와 Coalition for a Prosperous America는 동 법안이 통관 가치의 진정한 상업가격 반영을 통해 미국 내 형평성을 회복하는 첫 단계라고 환영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김준희
■ 자료원	캐시디 의원실(2.11), 폴리τικο(2.11)

(경제지표) 美 1월 고용 대폭 증가, 실업률 4.3%...고용시장 회복세 조짐

- (개요) 1월 미국 고용은 전월 대비 대폭 상승, 실업률은 3%로 소폭 하락
 -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1월 고용지표에 따르면 비농업 고용 전월* 대비 13만 명 증가, 실업률은 11월(4.5%), 12월(4.4%) 대비 소폭 하락한 4.3%(전망치 4.4%)를 기록(2.11)
 - * 12월 고용 수치는 50,000명 → 48,000명으로 소폭 하향 수정
 - 1월 고용 지표는 노동통계국 고용지표 수정 편차를 줄이기 위해 고용주 벤치마크·모델(사업체 개업-폐쇄) 체계를 업데이트하고, 정확한 실제 경제지표 반영 강조
 - * 고용지표는 두 개의 월간 조사를 기반으로 하며, 가계 조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동력 상태(실업 포함)를 측정, 고용주 조사는 산업별 비농업 고용, 근로 시간, 수입을 측정
- (상세) 1월 고용시장은 회복세를 보이며 연준의 금리 인하 동결 가능성 재확인
 - 1월 비농업 고용은 헬스케어(+8만 2천 명)·사회복지(+4만 2천 명) 부문이 전체 고용 증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 건설업(+3만 3천 명), 무역 업체(+2만 5천 명) 고용 증가
 - 제조업은 1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고용 증가를 기록, 연방정부 고용은 (-3만 4천 명) 지속적으로 감소, 금융(-2만 2천 명) 부문도 고용 감소
 - 1월 평균 시급은 37.17달러로 전월 대비 +0.4%, 12개월 연평균 시급은 +3.7% 인상
 - 노동통계국은 새로운 모델을 적용, '24년 고용지표(연간 200만 명→150만 명 감소), '25년 고용지표 (연간 58만 4천명에서 18만 1천 명 감소) 대폭 하향 조정
 - 블룸버그는 견조한 1월 고용·임금지표를 고용시장 회복의 신호로 평가하고, 연준의 '금리인하 동결'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보다 훨씬 강한 수치'라며 금리 인하 필요성을 재차 강조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문현주
■ 자료원	미 노동통계국(2.11), 블룸버그(2.11)

(관세) PIIE,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이 대미무역에 미친 영향 분석

- (개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트럼프 행정부의 '25년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무역 패턴 변화는 제한적이라고 분석
 - 트럼프 행정부는 전방위적 관세 인상을 단행하며, 일부 국가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는 등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 추진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고율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25년 글로벌 무역 패턴의 변화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평가
- (상세) 미국의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가의 무역 구조 변화는 제한적이며 전체 무역 패턴 재편은 미미
 - '24년 대비 '25년(10월까지) 미국과 협상을 진행한 19개국 중 9개국은 전체 무역에서 대미 무역 비중 변화가 1% 미만 수준
 - 상기 19개국의 '25년 대미 무역 증가율은 총 3.6%(1,618 달러 증가)로, 세계 무역 성장률 6.3%를 하회, 관세 정책이 대미 무역에 상대적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
 - 관세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원인으로 △관세 시행 전 선제적 물량 확보 △실효 관세율의 하향 조정 △공급망 전환의 구조적 제약 △중국 제외 주요국의 보복 관세 부재 등 지적
 - 관세의 정책적 효과는 일부 국가에 국한되고 전체 무역 패턴 재편으로 이어지지 않아,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축소 및 수출 확대 목표 달성이 제한적이었음을 시사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김예나
■ 자료원	PIIE(2.2)

의회법안 동향

구분 (현행일)	법안 (발의일)	대표 발의자	법안 및 주요 내용
핵심광물 (2.11)	H.R.3617 (하) (‘25.5.29)	John James (공)	〈미국 핵심광물 공급 안정화법(Securing America’s Critical Minerals Supply Act)〉 - 하원 통과 에너지부 조직법을 개정해, 미국 에너지 안보에 필수적인 희소 광물 등 핵심 에너지 자원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법안
제조업 (2.11)	H.R.7342 (하) (2.11)	Jeff Hurd (공)	〈미국 제조 일자리법(Made in America Jobs Act of 2026)〉 미국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다시 미국으로 환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 주요 대상 분야는 제조업과 고객 서비스업
적대국 견제 (2.11)	H.R.7509 (하) (2.11)	Nathaniel Moran (공)	〈PROTECT법(PROTECT Act of 2026)〉 미국 대학, 교수, 직원, 학생이 수행한 연구의 지식재산권 (IP)을 특정 외국 정부(중국·러시아·이란 등 적대국)에 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IEEPA 관세 (2.11)	H.J.Res.72 (하) (‘25.03.06)	Gregory Meeks (민)	〈2025년 2월 1일 대통령 국가비상사태 관련 결의안〉 - 하원 통과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상품 관세 부과에 사용한 비상사태를 종료하는 결의안
관세 규제 (2.11)	S.3841 (상) (2.11)	Bill Cassidy (공)	〈최종 거래가치 평가법(Last Sale Valuation Act)〉 1930년 관세법을 개정해 통관평가 시 거래가치 산정을 수정하는 법안 - 복잡한 해외 거래망을 악용하는 수입업체의 시스템 조작을 방지하고, 미국 공급망 건전성을 강화하며 CBP에 사기·자금세탁 방지 도구를 명확히 부여

* 미국 동부 시간 2월 12일 15시 모니터링 기준

현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u>Trump Administration to End Immigration Enforcement Surge in Minnesota</u> (트럼프 행정부, 미네소타 이민 단속 작전 종료)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차르 톰 호먼은 지난 몇 주 동안 미네소타에서 큰 변화를 보았다며 다음주 까지 대도시 집중 단속 작전(Operation Metro Surge)을 종료하겠다고 밝혀
The Washington Post	<u>See ChatGPT's hidden bias about your state or city</u> (챗GPT는 우리 도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연구진에 따르면 챗GPT는 온라인으로부터 흡수한 정보를 통해 지역별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게으른 주는 미시시피라고 평가했으며, 젊고 피부색이 밝은 사람을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해
The New York Times	<u>Americans Are Paying the Bill for Tariffs, Despite Trump's Claims</u> (트럼프 주장과 달리 美 소비자가 관세 부담하고 있어)
	뉴욕 연준과 컬럼비아대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25.11월까지의 관세부담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90%를 부담했으며, 트럼프 1기 관세의 경우 전적으로 미국 기업·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분석
CNN	<u>Trump repeals EPA's ability to regulate climate pollution, teeing up a legal battle with global stakes</u> (트럼프 “환경보호청은 기후오염 규제 못 해”)
	트럼프 행정부는 환경보호청(EPA)의 기후 오염 규제 권한을 박탈하는 규정을 최종 확정해. 트럼프는 규제 박탈이 공중보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고, 기후단체들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 표명
USA Today	<u>Homeland Security shutdown nears after funding bill stalls</u> (국토안보부 예산 교착으로 섰다운 돌입)
	미네소타주 이민단속과 관련해 국토안보부 예산안 통과가 교착상태에 이르며 국토안보부는 섰다운에 들어갈 전망. 공항 보안, 재난 구호 등 여러 서비스가 축소될 예정이나 전년도 대폭적인 예산을 편성 받은 ICE는 계속 운영될 예정

* 미국 동부 시간 2월 12일 15시 기준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6-05	트럼프 정부의 IEEPA 관세 대안으로 수입 면허제 활용 가능성 검토	2026.2월
US26-04	트럼프 행정부 출범 1주년 경제·통상 성과 및 현지 평가	2026.2월
US26-03	2026년 주요 통상 일정과 미국 통상정책 환경 변화 전망	2026.1월
US26-02	유엔과 세계은행이 전망한 2026년 세계 경제 및 정책 제언	2026.1월
US26-01	2026년 글로벌 핵심 리스크와 미국 정책 환경 변화 전망	2026.1월
US25-51	골드만삭스 2026년 세계경제 전망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12월
US25-50	美 2026 국방수권법(NDAA)로 살펴본 미국 국방정책 방향	2025.12월
US25-49	미·중 경제안보 검토 위원회(USCC) 의회 연례 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12월
US25-48	워싱턴 국제무역협회 'Trade & Tech Summit' 내용 및 시사점	2025.12월
US25-47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둘러싼 미국의 인식 전환과 통상 질서 변화	2025.12월
US25-46	2026년 USMCA 공동재검토 주요 일정 및 3국 입장과 현지 평가	2025.12월
US25-45	2025년 백악관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특이점과 경제무역 함의	2025.12월
US25-44	美-中 반도체 디커플링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2025.12월
US25-43	트럼프 정부, 미국형 소버린 AI 구축을 위한 『제네시스 미션』 출범	2025.12월
US25-42	美 연방 대법원 IEEPA 관세 재판 동향 및 트럼프 관세 플랜 B 전망	2025.11월
US25-41	美 연방정부 섯다운 종료 및 예산 합의 관련 주요 동향	2025.11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 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사-26 (2026.2.6.)		
코인사-25 (2026.1.24.)		

문의	이메일	전화
	jwshim@kotra.or.kr	
	shim.nature@kotra.or.kr	
		+1) 202-857-7919